

환경 현실과 언론의 역할



이 중 한
(서울신문 논설위원)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에게서 계몽적 해설 기사를 써야 하는 단계는 지나갔다.

산성비, 오존층, 온실효과, 자동차 배기가스, 핵폐기물, 수질오염 등은 일상어가 되었고 2급수·3급수 등의 수질악화 수준을 표현하는 몇가지 수치들도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환경문제가 교양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악화된 환경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추상화되고 있다. 환경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논의와 대응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인력·장비 및 과학적 지식이 없다. 따라서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규제기준을 높여라— 이런 언설이나 주문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될 때까지 잊고 지낸다. 마치 아주 잘 쓰여진 현대판 이솝우화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자면 보다 본질적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즉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에 오기는 했으나 문제를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수용해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무도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당국부터 같은 태도에 있다. 문제수용을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인규명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려는 거점이나 집단이나 기구나 개인차원의 전문가 마저 없다. 원인규명에 나서 보았자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담만 커지게 되고 문제만 더 복잡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 또 환경악화 상황이 가중될수록 더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 방지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악화됐을 때보다 비용을 덜 쓰는 것이 된다는 환경문제의 상식론이 우리에게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언론 역시 애매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를 쓰는 출발점에서부터 몇가지

혼란스러운 선택의 문제를 갖게 된다. 1) 어떤 환경오염 사태를 사실 또는 느낌대로 보도하는 것이 혹시 확대보도 인상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는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2) 환경보전보다 개발이 그래도 아직은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3) 지역적·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그 어느편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원칙이 환경우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은 것은 아닐까. 4) 환경사태에 더 비중을 두고 보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반론이나 공격에 대응할 결의가 과연 언론내부에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봉착할 때 언론은 스스로 정한 어떤 사시(社是)도 사실상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환경현실에 대응하는 언론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입장정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에 있어 언론의 주된 역할은 물론 있는 그대로의 뉴스와 정보를 알리는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자율적 판단으로 어떤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부각하여 호의적이나 비판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일 또한 언론의 의무이다.

오늘의 한국적 환경현실에 국민적으로 문제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원인규명에 나서는 일은 언론 역할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거점이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제인정에서 문제수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타 거점들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기관의 역할은 지자체 실시 이후 더 분명하게 개발우선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환경규제항목의 점검과 실시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 행정체제로서는 무엇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정부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그 협의 내용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더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97년 상반기 중 공사가 진행중인 고속철도·발전소·도로·대지조성·공단 등 21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는 123개 사업장(57.2%)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항목을 무시한 채 시공되고 있었고, 이중 공공사업이 95곳으로 민간사업 38개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체 사업에서의 불이행율도 공공사업이 61.6%, 민간사업이 49.4%인 형편이다.

민간산업이나 개인의 경우는 굳이 자료나 통계를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만 보아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만큼 쓰레기장화 되고, 손을 씻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유흥음식점과 러브호텔을 신축하는데 매달려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더욱 설치하지도 가동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강수계에 공공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그리고 설득가
능한 수준과 단
계를 구분하여
이해를 일치시키
는 과정을 만들
어가야 한다. 이
러기 위해 다음
과 같은 3가지
목표를 1차적 작
업과제로 삼을

아예 그 처리시설 설치작업에 반
대가 극심해 시행이 정지돼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오히려 똑같
은 이야기를 반복해 보도해야 한
다는 지루함까지 느끼고 있다. 그
러므로 문제인정에서 문제수용으
로 이행하는 역할을 언론이 감당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단숨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
것은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집요
하게 모든 개개인이 환경문제를
수용할 수 있게 할 정도의 정밀하
고 과학적인 기사를 쓰는 일일 것
이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환경문제의 우선순위를 계몽하는
일이다. 둘째는 부각된 문제에 의
견일치를 돕는 일이다. 셋째는 원
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파악하
고 이를 정리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객관적 공정
성에 대한 권위를 언론이 얻어낼
수 있고, 이 권위를 통해 지금까
지 어중간하게 지내왔던 사태의
규정이나 또는 지향해야 할 방향
의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인식과 그 위험상황
은 당연히 대중과 전문가간의 관
점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지역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

다. 정부와 과학자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학문영역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생태학자나 기후전문가가 우려하는 문제와 의학자들의 인지도 역시 같을 수 없다. 일반적인 현상은 과학적 이해보다는 대중들의 위험인식도를 더 중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제환경법 제정 역시 대중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사고상태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의 불안감을 더 잘 반영하게 되는 것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 견해에는 물론 그 나름대로 문제의 위험등급 판정의 기준이 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가. 그리고 그 해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일반은 잠재적 영향이나 장기간 지속현상에는 거의 무감각하다. 정책결정에 그저 단편적이고 응급 처치적인 방법을 더 잘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

환경문제가 진정으로 문제일 때

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없는 것」과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 관점별 고려가 각각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질오염에서 오염물질 부분만 보아도 산성농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탁도 등의 기준설정과 이 기준요인별 오염출처를 규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분명한 개선책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이 언제 누구에게 치명적인 것인가 아닌가, 또 각종 동·식물에의 영향은 무엇이며 언제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개선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또 한편 경제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오늘날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국민의료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오염

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라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이 역시
정치적 인식이 가능한 나라에서만
산출해 낼 수 있는 정책결정 자료
이다.

우리 현실에서 보자면 이 항목
들 거의 전부에 어떤 인식의 공통
점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요
소 자체가 전혀 없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일치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개선이 담보하고 있는 것은 그러
므로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면 이 다양하고 다극적
인 거점과 요소와 힘의 항목들의
성립을 우선 도와야 하고 또 의견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나름대로 오염원인을 규명하
고 악화상황을 설명하려는 자료들
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
만 문제를 수용하는데 모두가 긍
정적이 될만한 결정적 증거들은
오히려 옹색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여천공단과
다이옥신의 경우 당국 스스로 사

실을 밝히기를 어려워 했다는 사
실로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의 결정력은 과학적 자
료에서 출발된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서울 대기오염이다. 오존주
의보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오
존오염에 대한 긴급대책은 여전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에 대한 논증자료가 그저 오존오
염도 수치에만 있기 때문이다.

오염현실에서 오염수준은 지금
인체에 질환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에 의뢰해
1만3천여명의 14세이하 청소년
병력(病歷)을 조사한 결과를 보
면 어린이 18%가 알레르기성 비
염을, 22%가 천식을, 21%가 아
토피성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다.

'94년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서는 가슴이 답답함을 절감하는
시민이 49.2%, 두통 32.7%, 눈
이 따갑고 눈물이 난다가 24.6%
로 나타났다. 일상 속에서는 외국
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에 돌아
오면 2~3일 내 목이 부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례를 자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은 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함으로써 사태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하지만 역학조사는 좀처럼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증적 접근의 과제이다. 이 역학자료가 나타날 때 서울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억제정책은 그 실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언론은 이 접근에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조사를 촉구할 수도 있고 조사의 일부를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촉진제 역할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촉진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데 있다.

언론이 환경문제의 인식과 개선에 선도적 책임을 지는 일이 의무적이며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가진 상황이 있음에도 개선책이 호도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심층보도는 언론 고유의 책임일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그린라운드」

라는 차원으로 발전해 있다. 오염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상품은 불공정거래 품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수질오염 경우는 국내적으로도 오염된 후의 사회·경제적 경비보다는 사전에 물을 정화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실증적 자료 만들기에는 경제적 비용의 분석자료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에게서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연구가 한편 이루어졌다. 이 연구중 국민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지적이 다수 있다. 예컨대 『현행 유류별 교통세는 휘발유 경우 리터당 345원, 경유는 4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오염발생량이 적은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그리고 오염발생량이 많은 경유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각종 환경행정규제나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들의 실효성 또한 분석적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이 역시 언론이 문제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